경제와사회
일반논문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김주환*

이 글은 최근 기업, 노조,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 등 제 사회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라는 말로 포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이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견 이러한 사회적 책임화 현상은 사회의 도덕적 연대의 복원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연대의 공간을 통치 영토화하는 테크놀로지들이자 통치 영토화과정의 효과일 뿐이다. 이글은 우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살핀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에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제,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되고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함의를 논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사회도덕적 관심사들은 시장의 언어들로 재정의되어 경영전략의 한 구성요소로 축소되며, 윤리적 소비의 경우, 기존 권리의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변형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야기할 수도 있을 위험과 저항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신자유주의 통치에 포섭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운동 등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보진영의 제 흐름들은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 Georgia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 · 사회학 kdioni@hanmail.net

1. 머리말

그 동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국가나 시민사회 같은 공적 영역의 시장화, 그로인한 사회 전반의 공공성 약화는 흔히 지적되어온 현상이다. 시장 논리는 이타심이나 호혜성에 바탕한 연대의 정신을 대체하고 소멸시켜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경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도덕성 및 사회적 연대성의 부활 현상이 시장, 시민사회, 국가 모든 영역들에서 관찰되고 있다. 최근 공정소비,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경영, 공생경제, 윤리경영, 신뢰경영,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경영, 공동체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 동반성장, 공생발전, 기업시민, 책임시장경제 등 윤리 관련 어휘들을 수식구로 달고 있는 일련의 경제 용어들과 담론들의 폭발적 증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현상에서 주목할 점은 '시장의 공공화' 현상, 즉 상이한 작동 원리를 가진다고 여겨졌던 시장과 사회가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공공화 현상은 공적 영역의 시장화로 표현될 수 있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공공성의 후퇴를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호혜성과 공적 가치의 영역으로서 공적 영역은 시장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적 가치에 대한 요구에서 면제되어 오로지 사적 이익 추구를 미덕으로 삼아왔던 시장은 거꾸로 공공화한다는 점에서, 현재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공공화와 공적 영역의 시장화는 모순적인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권리의 주체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변형시키는 또 다른 역설적 현상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시장권력과 국가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해왔던 노동조합이나 기타 시민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부턴가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같은 전통적 권리 요구 및 최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소비자 권리' 대신 스스로 사회적 책임 정신에 입각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통상 국가가 담당했던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이제

는 그동안 사회적 권리의 주체로 이해되어왔던 노동조합, 소비자 및 시민들 스스로 떠맡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의 공공화와 공적 영역의 시장화 그리고 권리의 주체에서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의 자발적 변형이라는 이 모순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공리처럼 여겨왔던 공적인 것/사적인 것, 시장/국가, 개인적인 것/사회적인 것과 같은 구분들이 변형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최근 시장의 대표적 행위자인 기업, 권리의 주체로 이해되어 왔던 노조,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 등 제 사회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라는 말로 포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윤리적 소비운동을 중심으로 이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governmentality) 분석의 관점에서 계보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 이 작업을 위해 본고는 우선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변별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에 바탕해 사회적 책임화 현상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읽는 이론적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 사회적 책임화에 결부된 신자유주의 통치의 지식의 배치는 어떠하며 어떠한 진리의 체제(regime)가 동원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치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되는지를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로 나누어 경험적으로 고찰할 것이다.[2]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바탕해 시장의 공공화와 공적 영역의 시장화 그리고 권리의 주체에서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의 자발적 변형 과정에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통치의 시사점을 고찰할 것이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2000년대 중분 이후 발간된 주요 일간지 사설 또는 기사, 기업의 사보, 정부 및 정부 산하 연구소의 정책보고서, 주요 기업

1) 혹자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가 파산의 신호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Dean (2010b)도 주장하듯이, 본고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통치의 자기성찰성을 높여 신자유주의 통치가 더욱 정교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결코 신자유주의 통치의 파산을 의미할 수 없다고 본다.

2)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해둘 점은 푸코의 권력 개념 속에서 지식(담론)과 권력(테크놀로지)이 분리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푸코에게 권력은 항상 '지식/권력'의 복합체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그 둘을 나누어 분석할 뿐임을 밝힌다.

및 기업 부설 경제연구소의 각종 보고서, 경제 단체나 시민운동 단체의 보고서 등을 주로 활용했다. 학계의 학술자료들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크게 다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그것들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비롯해 사회적 제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생산한 자료라는 점이다. 둘째는 학술적 성격보다는 각종 정책의 입안이나 추진에 영향을 주고, 대중에게 특정 사고와 행동 양식을 보급하고자 하는 등의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담론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의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2. 통치성으로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복지정책에 맞서 민영화, 탈규제, 작은 정부로 표현되는 시장 친화적 국가 '정책'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때로는 지배계급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허구적 지배 '이데올로기'로도 정의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를 특정한 경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단순히 경제정책으로 환원될 수만은 없는 신자유주의 문화나 신자유주의 주체화의 에토스를 포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리고 허구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관점은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이데올로기로 간단히 치부될 수만은 없는 다양한 지식과 진리의 체제들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푸코는 그의 말기에 진행된 일련의 연구와 강의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파악한다.[3] 물론 푸코는 통치성 개념을 다양한 방식

3) 이때 통치(government)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정부 기관들의 정치적 통치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Foucault, 2007: 87~104)는 16~18세기 텍스트들에서 자기에 대한 통치, 타자에 대한 통치, 가족 통치, 경제 통치, 국가 통치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통치라는 용어를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실행되는 다양한 권력의 테크놀로지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통치 테크놀로지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로 수렴되거나 국가를 통하여 실행되

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충분히 정련된 분석도구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통치성 개념을 통해 푸코가 다루고자 했던 핵심을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잘 드러내는 방식은 그것을 '정치적 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4] 예컨대 국가이성(raison d'État),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각기 변별적 특징을 지닌 정치적 합리성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치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정치사상들을 중립적인 관념들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 물질적 효과들 속에서 다룬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러한 정치사상들은 그것들이 제기하는 모종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원하고 채택하는 일련의 통치 전략들과 테크놀로지들로 이루어진 '수단들'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치 전략들과 테크놀로지들은 그 실행을 위해 그것들이 참조하고 활용하는 절차들, 효율성 계산들, 성찰들을 가능케 하는 모종의 정치적 합리화의 원리들과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Foucault, 1991: 78~82; 1988b: 154~155; 2007: 108; Simon, 1995: 55~56; Lemke, 2002: 54~55).

이런 맥락에서 푸코(Foucault. 2007: 96)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물들의 올바른 배치"라는 라 페리에르(La Perriere)의 통치에 대한 정의가 통치의 이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본다. 이때 "사물"이란 인간과 객관적 대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체로서 영토나 부와 같은 객관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자원, 기아, 출산율, 생활 및 사고방식 등 권력이 관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된 인간들까지 포괄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그와 같은 사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 동원되는 전략과 전술 및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통치성 분석이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치성이라는 말을 통해 푸코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측면이다. 첫째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통치 대상을 구성하고 거기에 권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제가 작동하는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주체화의 윤리에 대한 것으로서,

---

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푸코가 근대국가의 계보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통치성 분석의 요체다. 이에 대해서는 Foucault(2007; 2008)를 참조하라.

4) 푸코는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라는 말 대신 때로는 정치 이성(political reason), 통치 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서동진, 2009: 321).

"지배의 테크놀로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접합(encounter)," "품행의 통솔(conduct of conduct)"이라는 통치에 대한 푸코(1988b; 2007)의 또 다른 규정들이 시사하듯, 자유로운 주체들이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계발하도록 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권력에 종속되도록 배치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정치합리성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합리화의 논리를 통해 통치를 실행하는가?[5]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바탕하여 통치의 과도함을 문제 삼고 국가의 정당한 활동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묻는다(Foucault, 2008: 13~25). 이러한 질문을 통해 국가의 인위적 통치가 아니라 시장의 자연법칙과 행위자들의 자발성에 의해 통치되는 자연적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라는 관념을 구성하고 그것을 국가와 대립시키면서 국가가 넘어서는 안 될 한계로 설정한다(Foucault, 2008: 291~316; 1984a: 242; 1989: 261; Burchell, 1991). 자유주의 통치는 시민사회가 최대한 제한 없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위해 다양한 테크닉들 및 지식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 수단들의 적절성은 그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시장 또는 시민사회를 발명하고 그것을 국가와 구분했던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시장이나 경제 외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모든 영역들을 시장과 경제의 영역으로 간주한다(Foucault, 2008: 239~265; 323; Lemke, 2001; Burchell, 1993; Shamir, 2008; 서동진, 2009: 330~331). 즉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개인들, 집단들, 가족들, 공동체들, 정부기관들 등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 및 활동들을 수요와 공급 또는 투자비용 대비 편익 계산 같은 경제적 형태에

5) 푸코는 질서자유주의라고도 불리는 독일의 신자유주의와 미국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두 가지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실질적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만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20세기 초 경제대공황 이후부터 대략 1970년대까지 이어진 케인즈주의 복지체제와 같은 복지주의가 하나의 통치성으로서 분석되어야 마땅하지만 아쉽게도 푸코는 이에 대해 별도의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복지주의 통치성에 대한 분석은 푸코의 제자들과 통치성 학파라고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복지주의 통치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ose et al. 2006; Rose & Miller. 1992; Donzelot. 1980; 1991; Dean, 1992; 2010a.

입각해 조직하고 경영하며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기업(enterprise)으로 간주한다. 경제학, 경영학 및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다양한 학문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지식 체제들과 테크놀로지들 속에서 노동자는 고용자와 거래하는 기업가로, 주부는 재테크를 통해 한 가계를 경영하는 CEO로(박혜경, 2010), 정부 기관의 활동은 국민을 고객으로 삼는 일종의 경영활동으로 변형된다. 인간의 지식, 기술, 재능은 노동력이라는 말 대신 인적 자본으로, 신뢰, 규범, 인간관계 등은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로 재정의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공적인 것/사적인 것, 시장/국가, 개인적인 것/사회적인 것 같은 익숙한 구분들은 변용의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은 그와 같은 익숙한 구분들을 공리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러한 구분들이 재구조화되는 방식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3.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에토스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소비

푸코 자신을 비롯해 많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 통치 속에서 호모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서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교육, 복지, 취업활동 등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개인주의화된 자조적(self-help) 주체로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는 단순히 자신의 행위와 운명에 대한 책임을 넘어 일반적 타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지고자 하는 도덕적 주체들, 레세니치(Lessennich, 2011)의 용어로 말하면 '사회화된 호모에코노미쿠스(socialized homo economicus)'로의 변형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소비 담론의 폭발적 증가는 그 일단을 보여준다.[6]

---

6) 본고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윤리적 소비를 신자유주의 통치라는 맥락에서 다룬다. 하지만 이때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은 이 글이 그것들이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애초에는 신자유주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제기되어 신자유주의와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경제학 담론들은 합리적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유 경쟁 모델로부터 행위자들 사이의 신뢰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Rose, 1999: 168). 이미 다양한 국제기구들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UN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개 원칙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를 2000년에 출범시켰고, OECD 역시 2000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개정하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진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외에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를 대외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가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운영관행, 소비자문제, 공동체발전 등 7개 핵심주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2010년 발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사회책임경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으로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 기업들 역시 앞 다투어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이나 사회책임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7]을 표방하면서 도덕적 이슈들을 경영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왔고, 언론과 학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일었다.

물론 밀턴 프리드먼(Fridman, 1970)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따위는 없으며, 기업의 책임이란 이윤 창출 단 하나뿐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지어는 사회주의적 기업관이라고 혹평하는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및 재계의 입장등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2009)가 협회 소속 국내 매출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7%의 경영자들이 CSR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86%의 기업이 경영

무관한 맥락에서 논의되어왔던 두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흐름과 만나 그것에 통합되어 통치술로 배치되는 과정이다.

7)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상황에 맞게 이 용어들을 병용할 것이다.

전략에 CSR 추진계획을 반영 및 추진하고 있으며, 윤리경영헌장을 채택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005년 80.5%에서 2009년 95%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교육 시행은 같은 기간 동안 60%에서 92%로, CSR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31%에서 70%로 증가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시장근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야기된 반자본주의 세계화 운동 등에 맞서 지배계급이 체제 수호를 위해 구사하는 전술 전환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하며(장상환·정성진, 2006), 거대 기업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한다(Banerjee, 2007). 이러한 비판들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본질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한 행위로 보지만,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가 경영활동의 본질로 통합되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윤리적 소비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기 시작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얻어내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와는 달리, 윤리적 소비는 자신들의 소비 선택 행위가 야기할 환경, 인권, 노동 등 제 사회적 문제들까지 고려하는 소비를 말한다. 이는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기, 생협활동, 환경 감시, 불매운동 등의 다양한 소비자 행위들을 포괄한다. 많은 소비자 실태 조사나 라이프스타일 조사들이 환경 및 노동, 인권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 등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8]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윤리적 소비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윤리적 소비 담론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즉 소비의 공공화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물론 과시적 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 등 전통적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소비 양식들이 논의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윤리적 소비가 특이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양적 효용의 극대화나 '자기'의 심리적 만족을 위한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일정정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들'과 '사회 전체'의 제 문제들까지 고려한다는

8) 일례로 2012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중 73%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구매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LG경제연구원의 2011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는 환경이나 윤리등 사회적 가치추구를 한국 소비자들의 7가지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분석했다.

점이다.

소비사회에서 정치적 시민들이 소비자로 변형된다는 지적은 수없이 있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치를 개별화된 이기적 소비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비판(Bauman, 2007; 2008), 집합적 참여를 개인들의 사적인 책임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Guthman, 2007; 2008) 등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들은 시민에서 소비자로의 주체성 변화가 야기하는 윤리적이고 집합적인 연대 및 정치적 활동의 소멸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정치의 소멸이 아닌 생활정치(life politics)의 출현으로 해석하는 기든스(Gidens, 1994)의 주장처럼, 소비자들이 단지 자신의 이기적 욕구충족만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존재로 남았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소비자권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윤리적 소비 역시 자신들의 소비 행위를 통해 오늘날 거대한 권력으로 떠오른 기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소멸이라는 비관론자들의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소비자권리운동의 경우에서처럼 권리의 주체로 자신을 이해해왔던 소비 주체들이 최근 자신들 스스로를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운동의 정치성이 소멸된다기보다는 통치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9]

그렇다면 이윤추구를 제일의 목적으로 삼아왔던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기업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압박해왔던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이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본고는 도덕의 회귀라고 불릴 만한 이러한 일들이 탐욕적인 시장근본주의적

9) 권리의 주체에서 사회적 책임 주체로의 변형 현상은 윤리적 소비 운동 외에도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 내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기존의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지양한다는 명분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표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애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국제표준기구의 ISO26000 개발이 기업을 넘어 정부와 각종 조직 모두를 모두 망라하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기업과 정부는 노조 및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자유주의에서 보다 인간적인 다른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거나, 폴라니(1991)식으로 말해서 시장을 사회에 되묻는(re-embedded)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거나, 하버마스(2006)의 용어로 말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생활세계의 탈식민화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지배계급의 타협적 반응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은 신자유주의 통치 합리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강화한다.

시장 이외의 모든 영역들까지 시장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그 동안 공적 영역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주요 담당자였던 국가 그리고 시민들의 도덕적 연대의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는 시장화한다. 이로써 사회적 책임, 타인들과의 도덕적 연대 정신 등 전통적으로 국가, 시민단체, 노조 등의 관심사였던 사회도덕적 질문들은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되어 간다(Shamir, 2008). 이는 기업 같은 시장 행위자들이 기존의 사회도덕적 질문들, 국가의 사회적 책임들을 그대로 떠맡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10] 오히려 시장은 그와 같은 것들을 통치의 영역으로 재구성한다. 이는 그와 같은 기존의 사회도덕적 관심사들, 사회적 책임 업무들,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들을 시장의 언어로 포착하고, 그러한 것들이 철저히 시장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도록 변형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예컨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자신의 본래적 경영 방식에 혹처럼 덧붙여지는 경영 외적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체가 기업 경영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결합된다. 즉 전통적으로 노무관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경영의 중요한 한 일부였던 것처럼 이제는 사회책임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반적 타인들 등에 대한 관리가 경영의 본질적 일부가 된다.

신자유주의국가는 다양한 통치 테크놀로지들을 통해 자신이 담당해왔던 사회적 책임 업무들을 개인 및 개별 사회 행위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도록 변형한다. 일례로 자조(self-help)의 에토스 등을 통해 건강, 빈곤, 실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삶의 문제들을 개인들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들로 생산해낸다. 기존에는

10) 물론 이 과정은 국가가 다양한 통치 테크놀로지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국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통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해왔지만, 이제는 사회 자체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이제 소비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증대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자신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들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사회에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과업을 이들 스스로 떠맡게 되었음을 뜻한다(Lessenich, 315). 윤리적 소비는 국가가 담당하던 사회적 책임 역할을 소비자들 스스로 떠맡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담론적 배치와 진리 체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도덕의 경제화

공적인 것/사적인 것, 시장/국가, 개인적인 것/사회적인 것의 구분은 고정된 자연적 실체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 대상을 산출하고 그것을 통치하고자 작동하는 권력/지식 배치의 효과이다(Foucault, 2008: 296~297; Mitchell, 1999; Ferguson & Gupta, 2005). 따라서 새로운 통치 대상의 산출은 위 경계선들의 재조정을 수반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국가나 사회 모든 영역을 시장과 동일시하고 비경제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시장의 경제적 통치의 대상으로 구성한다. 특히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신자유주의 통치는 도덕, 사회적 연대성, 사회적 책임 등 비경제적 영역으로 분류되던 것들을 새로운 통치의 대상으로 구성해낸다. 그리고 이 영역들을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구성해내기 위해서, 통치는 그것들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일련의 지식체계들을 마련하고, 이에 바탕하여 그 영역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조사를 통해 지식을 축적한다. 그리고 특정한 지식들과 행위들을 진리이자 정상인 것처럼, 다른 것들은 오류이자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진리의 체제들(regimes of truth)이 동원된다(Foucault,

1980a; 1980b; 1981; 2008: 19~22). 인간의 육체적 노동능력을 통치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경제학의 노동가치론이라는 지식체계가 개발되었고, 육체적 노동능력으로 파악되지 않는 인간의 지적, 심리적 측면을 통치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인적 자본론이 개발되었고,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규범적 측면들을 통치 대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사회자본론이 개발되었듯이 새로운 통치 대상의 구성과정은 일련의 지식의 개입을 수반한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론의 경우 윤리나 도덕적 관심사들을 기업의 경영활동과 결합하는 담론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2011년 제66주년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강조는 인용자).

> 기업을 경영하는 이유도 결국 보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노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룹은 지난 2002년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회 곳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신용과 의리에 기반한 동반철학은 작년 그룹의 공생발전 추진과제로 이어지며, 중소기업형 사업철수, 사회복지재단 설립 등을 가속화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내 존중과 배려의 이타적인 유전자를 더욱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나눔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2012년 신년사; 강조는 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로 탐욕경영 대신 윤리경영을, 자본의 자유 대신 자본의 책임을,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을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한화그룹 최고경영자는 기업 경영을 철저히 윤리적 가치와 언어들 속에 배치한다. 물론 기업이 이타심을 가지고

공생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자는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의 말이 단지 입바른 소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형성되고 있는 기업 경영에 대한 담론과 지식들은 윤리나 도덕적 관심사들을 기업 경영의 본질적 일부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기업보고서, 정부보고서, 경제 및 경영전문가들의 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뢰', '윤리', '지속가능성', '동반성장', '공존' 등의 기업의 윤리적 역할을 강조하는 언표들과 가장 빈번하게 같이 등장하는 언표들은 '기업의 불확실성', '위기', '리스크', '변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기업의 평판', '기업의 영속성', '효율성', '경쟁력' 등과 같은 경제 및 경영 용어들이다.

> 세계화·개방화시대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기업에게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 … 이미 기업의 활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경영**만이 시장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다(≪내일신문≫, 2011년 11월 28일 22면; 강조는 인용자).

>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사회 환원을 통해 **베푼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상 과제로 여긴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기업의 **이미지, 영속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기업 나이키는 1990년 축구공을 생산할 때 아시아 협력회사 국가의 아동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난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이고 **영업이익**도 37%나 하락했다(≪동아일보≫, 2011년 2월 21일 57면; 강조는 인용자).

> 어제 새해 시무식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험난한 환경**을 거듭 일깨우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 '**위기 대응**'과 '**변화**'였다. … 다음으로 재계 지도자들이 많이 든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사회적 역할**'을 거론했듯 … 동반성장과 **공존**을 모색해

야 한다. 그런 '**사회적 비용**'이 잠시 기업의 **생산성** 일부를 갉아먹을 수는 있지만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증대되면 장기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인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한국일보≫, 2012년 1월 3일 사설 35면; 강조는 인용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어떤 의미 효과를 낳느냐 하는 것이다. 위 인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불확실성'과 그로인해 높아진 시장의 리스크를 특징으로 하는 대외여건과 세계화의 흐름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으로 설정된다. 이를 극복하는 '전략'으로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은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된다.[11]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경쟁력' 상승이다. 이러한 담론적 배치에서 기업들이 실천하는 제 윤리적 관심사들은 철저히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며, 타인과의 도덕적 연대감은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이름으로 변형된다.

더불어 경영과 윤리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호환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 범위와 의미가 모호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보다 확고하게 경제학 및 경영학의 언어로 변환하는 시도도 다수 발견된다. 일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2007: 5~6)가 발행한 "윤리경영자율진단표"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자선(philanthropy)',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과 차별화한다. '책임'은 "받은 것에 대해 돌려주는 행동"인 반면, '자선'은 "선심 쓰듯 일방적으로 베푸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익의 사회환원'을 윤리경영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윤 창출과 윤리를 대립시키고 전자를 "사악한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 구분 속에서 "윤리경영은 기업에 덧씌워진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과 통합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성장

11)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흔히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이루어진 경영 리스크 분류 중 후자에 속하는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 관리의 일환으로 설명되곤 한다(보험연구원. 2010. 「평판리스크와 윤리경영의 역할」, *KiRi Weekly* 2월 29일자).

가능성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정의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기업 경제연구소의 경영정책 보고서는 "제지업체가 식수(植樹)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윤리의 영역이지만, 전자업체가 식수사업을 하는 것은 자선활동"이라는 예를 든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6).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상식과 달리 이미 윤리적 관심사들은 기업 경영에 덧붙여진 잉여가 아니라 이미 기업 경영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일부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과정은 기존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 개념을 경제학적 용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도덕적 연대감이라는 함의는 제거된 채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들은 "받은 것에 대해 돌려주는" 일종의 경제적 교환 행위로 재정의된다.

이러한 윤리나 사회적 책임 개념의 의미변화가 단지 친자본적인 기관이나 학자 및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매체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은 보다 확고하게 윤리나 사회적 관심사들을 경제학 용어로 변환한다. 한겨레신문 최우성 산업팀장은 다음처럼 말한다.

> Y=f(K, L). 경제학 교과서 앞머리엔 으레 낯익은 공식 하나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생산량은 자본(K)과 노동(L)이라는 투입물에 좌우된다는 뜻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공식 속에는 기업활동의 결실은 오로지 두 가지 투입변수인 자본과 노동(력)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야 한다는, 주류 패러다임을 떠받드는 핵심 전제가 깔려 있다. … 오늘날 부는 단지 자본과 노동만을 쏟아 부어 얻어지는 게 아니다. 때론 사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집단지성'이, 때론 해당 사회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공공재'가 그 사회의 부를 늘리는 데 더욱 중요한 핵심 구실을 하는 세상이다. … 이를테면 Y=f(K, L, S)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생산함수를 다시 써야 하는 순간인 셈이다. 사회에도 엄연히 제3의 투입변수 지위를 인정한다면, 이제 남은 일은 사회라는 투입변수에 돌아갈 몫을 규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분명하게 뿌리내리는 일이다. 이자배당과 이윤배당, 그리고 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사회배당'이라는 당당한 이름을 달고서 말이다. 사회공헌은 사회배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1세기 세상에서 사회배당은 피할 수 없는 기업의 의무이자, 기업에 도움을 준 사회가 누릴 엄연한 권리이다(≪한겨레신문≫, 2010년 5월 17일 34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의미화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이 시도가 '사회'를 그것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경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위치시키는 논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회'는 생산함수에 추가되어야 할 '제3의 투입변수'로 환원되고,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 요구들은 '사회배당' 요구로 바뀌며, 이로써 사회적 연대에 바탕한 도덕감이라는 측면은 '생산함수', '투입변수', '사회배당'이라는 용어 속에서 증발한다.

하지만 이렇듯 윤리, 사회, 사회적 책임 등의 비경제적 용어들을 경제학적 용어로 배열하는 담론적 배치만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의 실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실천활동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고 그러한 실천을 수행하는 것을 자연화(naturalization)하는 지식의 축적, 진리의 체제가 작동해야 한다. 이는 윤리, 사회, 사회적 책임 등을 측정 및 계산가능케 함으로써 그것들을 신자유주의 통치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통계 수치이다. 정부기관들, 기업연구소들, 경영자단체들, 학계 등에서는 2000년 초중반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재고, 경쟁력 향상, 근로자 자긍심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 주가나 매출 실적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수행되어 이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이 축적되었다.[12] 그리고 윤리적 소비나 삶의 의미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최근 소비 트렌드임을 보여주는 수없이 많은 실증적 조사들이 수행되어 왔다.[13] 이러

12) 일례로 전경련. 2009. 「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과」, *FIP* 제152호; EAI. 2007. 「한국 CSR의 현황, 인식과 실천」, CSR 국제여론조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6.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1.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그 외에도 여기서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관련 조사보고서 및 실증적 연구는 셀 수 없이 방대하다.

13) 이 역시 사례를 드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방대한 조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같은 정부기관을 비롯해 각 기업들, 학계에서 이와 관련한 수많은 지식과 조사결과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객관적 통계 수치들은 기업 경영에 하나의 진리의 체제로 작동하여 기업이 사회책임경영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만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자연화하는 진리의 체제로 심지어 생물학과 같은 자연지식들도 동원된다. 과거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윈의 진화론이 흔히 동원되었었듯이, 이제는 보노보 경제학,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등의 담론이 동원되는 것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가 같은 침팬지와 보노보의 행태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간에게는 침팬지의 이기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보노보의 이타적 유전자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학은 이른바 이기심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침팬지경제학만을 중요시하여 작금의 제 문제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들은 이기적 유전자에 바탕한 침팬지 경제학에 맞서 침팬지의 이기적 유전자와 보노보의 이타적 유전자 모두에 바탕한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또는 경영과 윤리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14](유병선, 2007a; 2007b; ≪매일경제≫, 2009년 12월 6일자; 2011년 10월 3일자; 2012년 1월 13일자). 이러한 생물학적 담론들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실천, 경제와 윤리의 만남을 자연법칙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진리 효과를 낳는다.[15]

2) 전략적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서 사회구성원들

기업이 윤리를 경영의 본질적 일부로 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자신을 커다란 사회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들과의 규범적 관계 맺음을 통해 그들과의 공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사회, 그 구성원들이

---

14) 이러한 자연과학 진리체제는 사회적 기업이나 윤리적 소비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안치용 외(2010), ≪한겨레≫(2009년 2월 27일자)가 있다.

15) 이 외에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언표 역시 진리 효과를 낳는다. 많은 담론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기업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자연스러운 진리로 전환한다.

어떻게 담론적으로 정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모든 조직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ISO26000 지침은 모든 조직들의 사회적 책임의 당사자들인 그 타인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라는 경영학 용어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정부기관들, 대부분의 국내기업들,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들 등은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강령들 안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자들을 설정해놓고 있다. 2012년 2월 23일자 ≪포스코신문≫(4면)은 이해관계자 경영이론을 창시하고 체계화하여 이 분야 세계최고 권위자로 통한다고 소개하며 에드워드 프리먼(Edward Freeman)과의 대담을 실었다. 이 대담 내용은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담론적 배치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프리먼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까보다는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하고, "수익성이란 기업이 여러 이해관계자를 적절히 관리한 결과"에 다름 아니며, "경쟁자보다 이해관계자 가치를 더욱 잘 창출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영속적인 성장까지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이해관계자 경영을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도구라는 측면에서 지지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란 주주,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세계시민들 등 해당 조직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들을 뜻한다. 경영 전문가들은 기업의 비재무적 경영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요구, 그들의 협조 및 위협 가능성, 기업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해관계자 관리가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니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그러한 원리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리 전략을 짜고 있다(강승훈, 200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이에 따라 각 조직들은 자신들의 사업이나 활동 목적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을 1차 이해관계자, 2차 이해관계자, 3차 이해관계자 등 그 관련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위계화한다. 그리고 이 위계화에 따라 조직이 취해야할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이 차별화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 주주들과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1차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노동, 인권 쟁점들이, 지역공동체가 2차 이해관계자로 설정될 경우에는

지역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지역사회와의 관계 같은 쟁점들이, 글로벌 공동체가 3차 이해관계자로 설정될 경우에는 인권, 경영의 투명성, 환경, 문화다양성 등과 같은 쟁점들이 기업이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항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도덕감에 바탕한 사회적 연대와 공생의 대상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경영용어로 변형되고,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들은 협조적 관계, 위협적 관계 등으로 분류되고 세밀하게 계산되어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관리의 대상으로 바뀐다. 프리먼 스스로 인정하듯이 과정은 규범적 활동이 아니라 이윤창출을 위한 전략적 활동이다.

3) 개인적 선택 행위로서 윤리적 소비 행위

비록 윤리적 소비를 자선과 구분하며 윤리적 소비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의 만족과 부합할 수 있는 경제행위여야 함을 강조하는 담론들(≪오마이뉴스≫, 2009년 4월 14일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담론이나 이해관계자 담론과 달리 윤리적 소비의 '윤리'라는 용어를 경제 용어로 재정의하는 담론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국가 관련기관들, 언론들, 윤리적 소비 운동가들 등 거의 모든 담론 주체들은 윤리적 소비를 지구환경을 살리고 제 사회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행위이자 윤리적 기업을 지원하고 비윤리적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치행위로 담론화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담론들 대부분이 국가의 역할을 문제 삼지 않거나 국가보다 이제는 기업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윤리적 소비 담론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국가는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정의되지 않고 비가시화되며, 그 대신 '개인들의 주체적 선택(choice)'에 따른 '소비행위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설정된다. 즉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개개인들은 '선택의 주체'로 재현된다(Rose, 1996b: 57~61).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비자가 세상을 바꾼다', 'voting with your dollar', 'the Vote in your Pocket' 같은 윤리적 소비를 표현하는 표어들은 이러한 변화를 응축적으로 보여준다.[16]

16) 이 과정은 '시장을 통한 정치'로 표현될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인 것의 경제적인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기업, 국가, 소비자 사이에 설정되어왔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기존의 관계는 국가가 빠지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마주치는 방식으로 재설정된다. 즉 소비자들이 기업 규제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왔던 국가가 비가시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이라는 언표와 그들의 '권리'라는 언표를 연결시키는 담론이 불가능해지고, 소비자 개개인들이 국가의 사회적 책임 역할을 대신하여 기업을 직접 압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담론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들은 다시 국가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기업 및 개인에게 이전하고, 경제, 사회, 국가의 구분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재생산하고 강화하게 된다. 일례로 "공동체 삶을 위한 소비, 내가 변화의 주체"라는 제하로 ≪경향신문≫, 2008년 9월 22일자(9면)에 실린 윤리적 소비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대담 일부를 보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윤리적 소비는 이타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은 과거처럼 조직적 사회운동을 통한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통해 실현하는 시대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생산뿐 아니라 소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중요하다. 돈이 있으니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의 주체라는

것의 일계기로의 환원을 함축한다(Lipschutz. 2005). 기업들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라는 시장 기반적 방법이 사용됨으로써 시장 자체의 작동논리는 비판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또한 예컨대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착취노동에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을 압박해 구원해줘야 할 '대상'으로 간주될 뿐 공동의 적에 맞서 같이 연대해야 할 정치적 '주체'로 사고되지 않는다. 결국 시장을 통한 정치는 정치적 저항의 위험성을 시장의 논리 회로 속으로 체제 내화한다. 또한 윤리적 소비 운동은 '모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표현 대신 '모든 정치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요약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정치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담론들은 개개인들의 자기 통치(self-government) 안으로 사회와 정치를 환원하는 통치 테크놀로지이다(Cruikshank. 1996).

자각이 필요하다.

박창순 한국공정무역연합 대표: …… 윤리적 소비를 한 마디로 말하면 책임 있는 소비다. 상품 구매 결정권을 가진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만이 아닌, 제조의 성격과 제조 과정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삶을 위한 깨어있는 소비다.

여기서 '구매 결정권'을 가지고 소비 선택 행위를 하는 소비자 개개인들은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주체'로 표현되며, 이들의 윤리적 소비는 '책임 있는' 행위로 표현된다. 또 상품 '제조의 성격과 제조 과정'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규제, 감시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소비자들 개개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따져봐야 하는 일로 표현된다.

흥미로운 점은 윤리적 소비 담론들은 윤리적 소비자들을 편협한 개인적 이익에 머물지 않고 일반적 타인들과 공동체 전체에 대해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주체로 재현하는 동시에, 그 실천은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소비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담론화한다는 것이다. 즉 윤리적 소비자들을 사회적 책임 담당자로 변환하는 담론들은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전략과 개개인들의 개인주의적 선택 행위를 강조하는 상반된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낸다. 푸코(Foucault, 1982: 213)의 말처럼 통치는 "전체화하면서 개별화하는" 권력형식인 것이다.

5.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 테크놀로지들

1) 권력의 테크놀로지

담론과 지식은 각종 국가기관들과 기구, 제도들 등 비담론적 실천들과 결합됨으로서만 실질적 권력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강제와 법적 금지와 같은 방식보다는 개인들, 조직들의 자율성과 자유에 기반해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인센티브 제공,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 관련 정보 제공, 각종 평가, 각종 사회적 책임 경영 시상 및 기타

후원 정책 등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이나 윤리적 소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다(Vallentin & Murillo, 2012). 예를 들어 정부는 2003년부터 공기업 혁신평가에 윤리경영과 사회적 공헌활동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했고, 2011년부터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에 대한 경영 평가시 해당 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일자리 창출활동 노력 및 성과 등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KSA)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에서는 ISO26000 대응을 위해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각종 조직의 주요 운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교육, 사회적 책임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국민연금 등을 통해 사회책임투자금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펀드 투자를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이다.

윤리적 소비와 관련해서도 국가는 법적 강제보다는 다양한 윤리적 소비 교육 및 유인책들을 활용한다. 예들 들어, 한국소비자원(KCA)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들에서도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 등 윤리적 소비 관련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을 위해 2012년 5월 현재 소비자교육시범학교 22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국가기관들은 친환경 제품이나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탄소성적표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라벨들을 전자제품에 부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 유인책으로 2011년 7월 22일부터 9개 금융사와 연계하여 '그린카드'를 발행하여 탄소성적표지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윤리적 소비 운동조직들도 나름의 방식과 기준을 통해 선별된 윤리적 소비 상점, 음식점, 회사의 제품들 및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소비나 윤리적 소비 실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몸에 배지 않아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이다(한국소비자원, 2011). '몸에 배지 않아' 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몸에 작동하는 반복적 규율

을 통해 윤리적 소비 습관이 길들여져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 각 급 학교들의 소비교육 프로그램들이 교과목별 관련 단원과 연계된 소비습관 함양 체험활동을 통해 조직되고 있다. 다양한 소비 관련 단체나 기관들에서 윤리적 소비, 친환경 소비, 녹색 소비 체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권력은 소비습관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육체 속에 각인된다.

2)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체와 영혼, 사고, 존재방식 등을 전략적으로 통치함으로써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구성하는 일련의 통치술을 뜻한다(Foucault, 1988b: 225; 1984b: 351; 1984c: 48~49). 푸코(Foucault: 1988b: 225)는 통치성을 "지배의 테크놀로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만남(encounter)"[17]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치가 개개인들의 자기계발의지에 의존하면서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포섭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 또는 기업의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사회책임경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러한 경영방식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성찰하도록 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책임경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이름이 붙은 자기진단 도구들이다. 그중 가장 많이 보급되어 널리 쓰이는 것이 한국표준협회에서 ISO26000 지침에 바탕하여 개발한 "ISO26000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이다.[18]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최고 리더들 및 각부서의 리더들이 자신과 자기 조직의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손쉽게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국표

17) 푸코는 때로 권력과 권력이 고정된 것으로서의 지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푸코는 지배를 권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8) 이와 유사한 자가진단테스트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개발한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발한 "윤리경영 자가진단 테스트", 전경련이 개발한 "윤리경영자율지표" 등을 들 수 있다.

준협회 홈페이지에도 설치되어있다. 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는 조직의 리더나 그 조직이 사회책임경영을 위해 어떤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사회적 책임인식',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핵심주체와 쟁점 분석',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전략, 계획 수립', '실행전략', '의사소통', '검증전략', '개선전략' 등 8개 과정으로 나누어 이를 36개 문항으로 평가한 후, 이에 대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60개 문항을 통해 평가한다. 자가평가를 마치면 자신의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에 따라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자신과 자기조직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결과가 나온다. 조직 리더들은 수치로 세밀하게 측정된 진단 결과에 바탕해 자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윤리적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지침을 얻게 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일부 최고경영자나 고위 리더들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의 윤리적 감각이 높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업들은 도덕적 인재, 공감능력, 책임감을 지닌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이신철, 2010).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경영자단체들은 신입사원 채용시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하되 그것을 정량적 평가보다는 심층적인 질적 평가를 할 것을 각 기업에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채용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 내부와 언론들을 통해 '대학생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봉사단체들' 같은 제목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 개개인들이 봉사활동참여를 자신들을 도덕적 인재, 공감능력과 책임감을 지닌 인재로 계발하기 위한 자기의 테크놀로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봉사활동 실적은 자신을 얼마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윤리적인 인재로 자신을 계발했는가를 측정하고 성찰하는 기준이 된다. 신입사원 채용 평가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깊이 있는 질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해보며 그 느낌과 생각의 결과를 자신의 태도와 의식 형성에 반영토록 하는 보다 성찰적인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작동시

키도록 만든다. 각 대학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봉사활동보고서 작성, 각종 봉사활동체험수기 공모 등은 그와 같은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개개인들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만 하는 활동만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됨으로써 국가권력은 개개인들의 자기구성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그들과 연대하여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윤리적 행위이자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구성하는 행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봉사활동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기업이 요구하는 윤리적 인재로 자신을 계발하는데 무익한 것이 된다. 대신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기관들이 고아원, 양로원, 장애시설 등 그동안 국가가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담당해왔던 영역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 참여라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구성되는 자아는 사회갈등을 통한 사회개선과 사회적 책임은 배제한 채 오로지 사회통합을 위해서만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아로 한정된다.

윤리적 소비와 관련하여, 통치는 자신들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체로 계발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의 의지를 활용한다. 윤리적 소비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들의 소비 선택 행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자신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라고 보는 자기이해 양식을 발전시킨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소비행위가 미칠 다양한 결과들을 폭넓게 성찰하고 이에 바탕해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스스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된다. 우선 윤리적 소비, 친환경 소비의 관점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2009년 에너지관리공단, 머니투데이, 에듀머니, 이로운몰 등이 공동으로 '녹색가계부' 캠페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녹색가계부 같은 친환경 가계부는 자신들의 소비로 야기된 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을 기입하여 친환경 소비의 관점에서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것이다(배순영, 2010a). 주부들은 친환경 가계부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소비행위가 환경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줬는지 전달에 비해 자신의 소비 행위가 환경 문제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

는지를 비교하고 성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소비습관을 바꿈으로써 자신들을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윤리적 자아로 구성하는 실천을 수행하게 된다.

그 외에 소비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윤리적 존재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자신을 둘러싼 사회 및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성찰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 윤리적 소비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질문으로 네 가지를 든다. "'이 제품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소비행동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 제품을 생산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환경친화적인가?'"(≪인터뷰 365≫, 2011년 1월 17일자). 또한 다양한 관계기관들 및 소비자운동단체들은 윤리적 소비나 친환경 소비를 위한 다양한 행동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개인들의 측면에서 이 지침들은 소비습관을 바꿔 보다 윤리적인 소비자로 자신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녹색가계부' 캠페인은 다섯 가지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목표세우기, 가계부 꾸준히 쓰기, 신용카드 멀리하고 대형마트 덜 가기, 녹색 가게 들러보고 친환경 제품 정부 파악하기, 가족 동참시키기 등이 그것이다(배순영, 2010a). 이러한 질문들 및 지침들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성찰적 질문을 제기하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전략적으로 변형시키는 실천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기 통치를 위한 테크놀로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자기의 테크놀로지들을 작동시킨 결과는 윤리적 소비를 습관화하고 자기 행위의 사회적, 환경적 의미에 자긍심을 느끼는 윤리적 소비자로의 변화이다. 녹색소비실천사업에 참여한 후 보인 소비자들의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준다.

>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과 CO_2 감축량을 확인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춥다' '덥다'고 불평이 심했으나 점차 익숙해져 아이들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배순영, 2010b: 33).

3)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

신자유주의가 비시장 영역들마저 모두 시장으로 재편하여 개인을 포함한 모든 단위 구성원들을 기업가들로 간주하고 그 영역들이 시장의 합리성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는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본과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기에 원심력이 더욱 강할 수밖에 없는 개인화된 기업가 주체들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 개개인들이 자신들을 한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토록 하여 그들을 통합해내는 통치 기술을 푸코(Foucault: 1988b)는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individuals)라고 부른다.[19] 이는 사회적인 것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the social)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이른바 사회 또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통치 대상으로 구성해내는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Lemke, 2011: 175).

자유주의는 종으로서의 집합적 인간, 즉 인구(population)를 생체권력의 통치 대상으로 구성했다. 생명, 안전, 건강 등에 관련된 이들의 일체의 삶의 영역을 사회적인 것으로 표상하면서, 국가는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제도 등을 통해 인구라는 전체로서의 국민들에 대한 통치를 수행해왔다. 즉 자유주의는 푸코가 안전장치(security)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 등을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로 삼아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통치는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인간, 전체로서의 국민들을 표적으로 삼기보다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개개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 제 안전장치들을 작동시킴으로써 개개인들을 통합해내기보다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자조(self-help)의 윤리를 통해 개별 기업가로서의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고, 자기를 계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를 신자유주의 경제생활의 격자 속으로

---

19) 푸코(Foucault. 1988b) 는 자기의 테크놀로지와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구분한다. 전자는 개개인들의 윤리적 자기 구성을 위해 동원하는 자기해석과 자기인식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뜻하며, 후자는 '사회적인 것의 테크놀로지(technology of the social)'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개개인들이 스스로를 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한 사회나 국가에 통합해내는 권력 기술을 뜻한다(Lemke, 2011: 175).

통합해낸다. 즉 이른바 자기에 대한 책임화, 자기계발의 윤리 등이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의 한 형태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의 안전장치들이 제공했던 구성원 간 연대와 사회통합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사회적 책임화의 윤리이다. 사회적 책임화는 신자유주의 통치 속에서 개인 및 모든 단위들이 개별 기업가로 변형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위기를 보완하여 그들에 대해 구심력을 작동시키는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통치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을 포함한 모든 단위들의 사회적 책임화와 개별 기업화라는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전략 모두 사실은 신자유주의 통치를 구성하는 분리불가능한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이 점은 최근의 각종 소비 트렌드 조사(LG경제연구원, 2011; 한국소비자원, 2011; ≪매일경제≫, 2011년 12월 28일자)에서 어째서 환경이나 윤리 등 공동체주의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이와는 상반되는 개인주의적 생활방식, 자기계발욕구, 경쟁에서 생존 등 개인주의적 관심들이 동시에 소비자들의 소비문화를 특징짓는 요소들로 조사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많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들이 지적하듯 신자유주의 통치는 개개인들을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기업가로 변형하는 개별화 전략을 작동시킨다. 하지만 푸코(1982: 213) 스스로도 강조했듯이 통치는 "전체화하면서 개별화하는" 권력 형식이다. 즉 신자유주의 주체란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쓰는 호모에코노미쿠스인 동시에(서동진. 2005),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까지 기꺼이 도덕적 책임감을 지고자 하는 사회화된 호모에코노미쿠스(socialized homo economicus)인 것이다(Lessennich, 2001).

이때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회적 책임화라는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전체로서의 국민들의 삶의 세계로서 단일화된 사회에 대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것의 영역들에 대해서 작동한다는 것이다(Rose, 1996a; 1999; Herbert-Cheshire, 2000; Fitzsimons, 2000; Hay, 2003; Coffey, 2003; Lipschutz, 2005). 기존에 국민국가적 영토 안에서 한 사회는 단일한 연대의 공간으로 이해되었고, 개개인들은 국민국가에 대해서 단일한 관계를 지니는 하나의 국민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의 활동 공간은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좁게는 자신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넓게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연대의식을 느낀다. 국민국가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정의되어왔던 사회, 국민 같은 용어들이 그 적실성을 점차 상실해가면서 사회통합의 위기가 증폭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 통치가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공동체들이다. 개개인들을 그들이 자신을 정체화하고 유대의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 이념, 취미, 지역, 생활공동체들로 통합해내는 것이다. 각자가 상상한 자신의 소속 공동체에 대해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가 개인들을 통합해내는 한 방식인 것이다.[20]

따라서 윤리적 소비란,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환경문제로 인해 똑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글로벌 시민들과 동질성을 느끼고 자신이 속했다고 상상한 글로벌 공동체에 대해 친환경 윤리적 소비를 통해 헌신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그 공동체에 통합되는 테크놀로지이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이란 결국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고 경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을 통해 나름의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 기업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자들을 거기에 통합하는 테크놀로지인 것이다.

---

20) 이 과정은 종종 '사회자본 증진 방안' 등의 정책적 표현을 띠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자본이란 개개인들의 일상적인 규범적 삶, 사회적 관계들에까지 파고들어 그것들을 통치 대상화하는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Coole, 2009; Peter & Patrick, 1999). 공동체가 개인들에 대한 신자유주의 통치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허점 내지 한계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국가 테두리 안에서 개개인들을 단일한 시민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것에 비해, 공동체들을 통한 개개인들의 통합은 공동체 사이의 이질성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통합의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위기는 신자유주의 통치에 균열을 야기하는 저항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푸코(Foucault, 1980a: 95)가 말했듯이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는 법이다.

6. 맺음말: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거대한 동맹과 그 함의

기업들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시장의 공공화 현상, 지금까지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와 시장에 맞서 투쟁해왔던 소비자, 노동조합, 시민단체들 등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현상은 공적인 것/사적인 것, 시장/국가, 개인적인 것/사회적인 것과 같은 구분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반영이자 신자유주의 통치가 작동하는 한 방식이다. 비시장, 비경제적 영역이라고 간주되어온 모든 영역들을 시장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 속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 역할의 주된 담당자였던 국가가 시장화하면서 사회적 책임, 타인과의 도덕적 연대정신 등 도덕적 질문들이나 역할들은 기업과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사로 이전된다. 기업의 측면에서 이 과정은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시장의 언어로 변형시켜 새로운 통치대상이자 수단으로 영토화하고 사회책임경영이나 윤리경영 같은 이름으로 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이다. 소비자, 노조, 시민단체들 같은 기존 권리주체들의 측면에서 이 과정은 그들이 권리의 주체에서 사회적 책임 담당자로 변형되고 자신들이 사회에 가할 수도 있을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일을 떠맡게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최근 범람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담론들은 도덕의 회귀가 아니라 도덕이 시장화되어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연대정신의 부활이 아니라 저항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통치 속으로 포섭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불과한 사회적 책임화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기업과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 사이에 별다른 의견차이나 저항 없이 암묵적인 전사회적 합의 속에서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책임화의 신자유주의 통치를 둘러싸고 이들 사이에 거대한 동맹이 이루어진 것이다.[21]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자신이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것은 우선

21) 심지어 경제나 경영, 소비 등 세속적 가치들과 가장 거리가 있어 보이는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동맹에 동참한다. 일례로 가톨릭신문은 2011년 4월 24일부터 <이용훈 주교에게 듣는 신앙과 경제>라는 기획연재를 싣고 있다. 여기서 이용훈 주교는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책임투자(SRI)를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윤리적 소비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경영전략이자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압박해왔던 노동계, 소비자, 시민단체들 등의 운동조직들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주면 투쟁이나 파업 등을 거치지 않고도 그들이 제기해왔던 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이 자신들의 목표와 양립가능하다고 계산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비록 소소한 입장 차이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저조한 노조가입률로 인한 노조의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 기업별노조체계로 인한 교섭력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노조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할 수 있는 매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강충호, 2008; 권순식, 2008; 노광표, 2008; 이장원 외, 2006; 이장원, 2006; 하승창, 2004; 권순식·김영두, 2007). 두 진영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노조,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책임화와 관련해서도 양 진영은 동맹을 맺는다. 노조,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지 개선, 조직의 공적 신뢰 강화, 조직원의 사기고취, 기업과의 잠재적 충돌 예방, 정치적 개입의 정당화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봤다. 또한 그것은 기존 대립적, 투쟁적 노동운동, 이른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문제에 대한 반성 속에서 자신들의 활동 방식을 혁신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졌다(배상호, 2010; 권순원, 2010; 김동원, 2007; 김주일, 2004). 이를 두고 경영계 일부에서는 노조나 시민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는 시도(권혁철, 2010)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영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조와 시민단체의 투쟁들을 무책임한 불법, 폭력 투쟁 일변도였다고 진단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 및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해왔다.

윤리적 소비의 경우,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진보진영의 학자들이나 언론들마저 윤리적 소비를 시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고 권장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와 동맹 관계를 맺는다. 김종엽은 "생산과 노동자, 시민의 영역에서 패배가 잦은 이 시대에 윤리적 '소비자-시민'은 저항과

변혁의 새로운 준거점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한겨레≫, 2009년 9월 2일자 30면).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은 2008년 5월 15일자(63면) "세계화의 역풍, 신빈곤시대 대안찾기"라는 제하의 창간특집기사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또는 시장지상주의에 대한 대안과 대항의 움직임이 "마이크로 크레딧", "공정무역 등의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은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트위터,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종이신문에 실리는 형태로 "착한시민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신자유주의 옹호자와 비판자들을 막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조,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속에 이들이 거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 통치가 이러한 정치적 이분법들을 가로질러 작동하며 그와 같은 기존의 진영 분류로는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가 진보, 좌,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에게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가 이들의 요구를 접합하여(articulate) 포섭함으로써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권력 효과는 극대화하는 고도의 권력 효율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진보, 좌,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이 기업을 포함한 제 조직 및 개인들의 사회적 책임화를 대체로 옹호하고 그것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으로 평가하는 오류에 빠진 것은 공적인 것/사적인 것, 시장/국가, 개인적인 것/사회적인 것 같은 구분들을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고, 신자유주의화를 시장 또는 경제가 시민사회와 국가, 공적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도덕적 연대감이나 공공성 등의 가치를 질식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질식되었던 시민사회와 국가의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가 공적인 것/사적인 것, 시장/국가, 개인적인 것/사회적인 것 같은 구분을 가로질러 모든 것을 시장과 경제의 합리성으로 영토화하면서 작동한다는 점이다(Lemke, 2002). 즉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과 사회 곳곳에서 사회의 도덕적 연대감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등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일탈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통치가 사회의 도덕적 연대의 공간을 통치 대상화하는 현상이자 신자유주의의 통치 테크놀로지 그 자체인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진보진영 일각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사실상 경제와 사회의 구분을 넘어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가장 훌륭한 구현물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각 단위의 사회적 책임화를 경제를 사회에 되묻는 시도로 보면서 이를 시장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전략으로 제기하는 것은 결국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 통치에 공모하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저항 잠재력의 자발적 제거, 도덕적 연대 및 운동 정치의 시장화이다. 공적인 것/사적인 것, 시장/국가, 개인적인 것/사회적인 것의 구분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공생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공동체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 동반성장, 공생발전과 같은 담론들에 의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훌륭하게 작동한다.

(2012년 8월 17일 투고, 10월 9일 심사, 11월 5일 채택)

□ 주요 용어

신자유주의, 통치성, 권력, 지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사회적 책임화

□ 참고문헌

신문 · 연설문

≪가톨릭신문≫. “이용훈 주교에게 듣는 신앙과 경제” 기획시리즈.

≪경향신문≫. “착한시민프로젝트” 기획시리즈.

≪내일신문≫. 2011년 11월 28일자 “윤리경영이 답이다.”

≪동아일보≫. 2011년 2월 21일자. “윤리, 환경 없인 미래 없다.”

≪매일경제≫. 2009년 12월 6일자. “기업의 사회공헌.”

_____ . 2011년 10월 3일자. “협력·신뢰로 꽃피우는 ‘성장 사회’.”
_____ . 2012년 1월 13일자. “기업의 진면목…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_____ . 2011년 12월 28일자. “올해 키워드 ‘생존·자존·공존’.”
≪오마이뉴스≫. 2009년 4월 14일자. “그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값을 치러야죠.”
≪인터뷰 365≫. 2011년 1월 17일자. “당신은 ‘착한 소비자’인가.”
≪포스코신문≫. 2012년 2월 24일자. “지속 성장하고 싶은가?… 이해관계자 가치를 창출하라.”
≪한겨레신문≫. 2008년 5월 15일자. “세계화의 역풍, 신빈곤시대 대안찾기.”
_____ . 2009년 2월 27일자. “윤리적 소비의 힘! 착하고 튼튼한 경제 만든다.”
_____ . 2009년 9월 2일자. “윤리적 소비자-시민의 시대를 위해.”
_____ . 2010년 5월 17일자. “기업, ‘사회공헌’ 그만하라.”
≪한국일보≫. 2012년 1월 3일자. “사회적 책임 더 커진 2012년 경제계.”
한화그룹 김승현회장 2012년 신년사.
2011년 제66주년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일반논문 · 보고서 · 기타

강승훈. 2003. 「이해관계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LG주간경제≫, 749호.
강철웅. 2008. 「ISO26000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리뷰≫, 41호.
강충호. 2008. 「ISO26000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노동리뷰≫, 41호.
권순식.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운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권순식·김영두. 2007. 한국노동중앙연구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대응』.
권순원. 2010. 「변화하는 기업경영과 USR: USR의 이론과 효과」. 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문.
권혁철. 2010.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란」. ≪월간조선≫, 3월호.
김동원. 2007.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월간노동법률≫, 8월호.
김주일. 200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5회 연속기획워크숍: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 발표문.
노광표.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의 노동사회적 의의」. 한국노동연구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ISO26000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 토론회 발표문.
대한상공회의소. 「2012년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보도 자료 (5월

21일 발표).
배순영. 2010a.「에너지 사용량 적는 녹색가계부를 아십니까?」. ≪소비자시대≫, 1월호.
_____. 2010b.「지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녹색 가정 만들기」. ≪소비자시대≫, 7월호.
박혜경. 2010.「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권 2호.
배상호. 2010.「Union Social Responsibility」.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보험연구원. 2010.「평판리스크와 윤리경영의 역할」. ≪KiRi Weekly≫, 2월 29일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CEO Information 제351호: '윤리경영'의 선진사례와 도입방안』.
서동진. 2005.「자기계발의 의지, 자유의 의지 :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본 한국 자본주의 전환과 주체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9.「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75호.
안치용 외. 2010.『한국의 보노보들: 자본주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부키.
유병선. 2007a.『보노보혁명: 제4섹터, 사회적 기업가의 아름다운 반란』. 부키.
_____. 2007b.「보노보경제학」. ≪Bank of Korean News≫, 2월호.
이신철.「한국 대기업 인재상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장원 외. 2006. 한국노동연구원.『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이장원. 2006.「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사관계」. ≪노동리뷰≫, 20호.
장상환·정성진. 2006.「최근 경제교과서 비판에 대한 검토」. 장상환 외 편.『경제교과서 살리기: 경제교육과 경제교과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필맥출판사.
전국경제인연합. 2008.『FIP-2008 제110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조사 결과』.
_____. 2009.『FKI Issue Paper 제152호: 윤리경영 현황 및 CSR 추진 실태 조사결과』.
폴라니, 칼(Karl Polanyi). 1991.『거대한 변환』. 박현수 역. 민음사.
하승창. 2004.「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만나는 곳,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사회≫, 94호.
하버마스(Jurgen Habermas). 2006.『의사소통행위이론 1』. 장춘익 역. 나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1.『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한국소비자원. 2011.『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EAI. 2007.『CSR 국제여론저사: 한국 CSR의 현황, 인식과 실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6.『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전략적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11.『2011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Banerjee, Subhabrata B. 200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Cheltenham: Edward Elgar.

Bauman, Zigmunt. 2007. *Consuming Life*. Cambridge: Policy Press.

_____. 2008. "Exit *Homo Politicus*, enter *Homo Consumens*." in Kate Soper & Frank Trentmann (ed.). *Citizenship and Consump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39～153.

Burchell, Graham. 1991. "Peculiar Interests: Civil Society and Governing 'The System of Natural Liberty'." in Graham Burchell et al. (ed.).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 Rationalit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pp. 119～150.

_____. 1993. "Liberal Government and Techniques of the Self." *Economy and Soceity*, 22(3), pp. 267～282.

Coffey, Mary K. 2003. "From Nation to Community: Museums and the Reconfigruation of Mexican Society under Neoliberalism." in Jack Z. Bratich et al. (ed.). *Foucault, Cultural Studies, and Governmentalit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207～241.

Coole, Diana. 2009. "Repairing Civil Society and Experimenting with Power: A Genealogy of social Capital." *Political Studies*, 75, pp. 374～396.

Cruikshank. 1996. "Revolutions within: Self-Government and Self-esteem." in Nikolas Rose et al. (ed.).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9～36.

Dean, Mitchell. 1992. "A Genealogy of the Government of Poverty." *Economy and Society*, 21(3), pp. 215～251.

_____. 2010a. "What is Society? Social Thought and the Arts of Governmen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4), pp. 677～695.

_____. 2010b. "Postscript to the Second Edition: The Crisi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2nd Edition). Los Angeles: Sage, pp. 261～265.

Donzelot. Jacques. 1980. *The Policing of Families: Welfare versus the State*. Robert Hurley (trans.). London: Hutchinson.

_____. 1991. "The Mobilization of Society." in Colin Gordon (trans.). Graham Burchell et al. (ed.).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 Rationalit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pp. 169～179.

Fitzsimons, Patrick. 2000. "Neoliberalism and Social Capital: Reinventing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the AEREA Conference, New Orleans.

Foucault, Michel. 1980a. *The History of Sexuality 1*. Rober Hurley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_____. 1980b. "Truth and Power." Collin Gordon et al. (trans.). Collin Gordon (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pp. 109～133.

_____. 1981. "The Order of Discourse." Ian McLeod (trans.). Robert Young (ed.). *Untying the Text:a post-structuralist reader*. Boston: Routledge, pp. 48～78.

_____. 1982. "The Subject and Power." in Hubert Dreyfus and Paul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08～226.

_____. 1984a. "Space, Knowledge, and Power." in Lydia Davis (trans.). Paul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pp. 239～256.

_____. 1984b. "On the Genealogy of Ethics: An Overview of Work in Progress." in C. Porter (trans.). Paul Rabinow (ed.).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 pp. 340～372.

_____. 1984c. "What is Enlightenment?" in C. Porter (trans.). Paul Rabinow (ed.).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 pp. 32～50.

_____. 1988a. "Technologies of the Self." in Robert Hurley et al. (trans.). Luther H. Martin et al. (ed.).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p. 16～49.

_____. 1988b. "The Political Technology of Individuals." in Robert Hurley et al. (trans.). Luther H. Martin et al. (ed.).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p. 145～162.

_____. 1989. "An Ethics of Pleasure." in John Johnston (trans.). Sylvere Lotringer

(ed.). *Foucault Live: Interviews, 1966-84*. New York: Semiotext(e), pp. 371～381.

_____. 1991. "Questions of Metho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in David J. Parent (trans.). Graham Burchell et al. (ed.).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pp. 73～86.

_____. 1998. "Practicing Criticism." in Alan Sheridan et al. (trans.). Lawrence D. Kritzman (ed.). *Politics, Philosohpy, Culture: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7-1984*. New York: Routledge, pp. 152～156.

_____. 2000. "Omnes et Singulatim: Toward a Critique of Pollitical Reason." in Robert Hurley et al. (trans.). James D. Fubion (ed.). *Power: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New York: The New Press, pp. 298～325.

_____.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Graham Burchell (tra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_____.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Graham Burchell (tra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Ferguson, James & Akhil Gupta. 2005. "Spatializing States: Towards an Ethnography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in Jonathan Xavier Inda (ed.). *Anthropologies of Modernity: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Life Politics*. Oxford: Blackwell, pp. 105～131.

Friedman, Milton.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 13, 1970.

Giddens, Anthony. 1994.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Polity Press.

Guthman, Julie. 2007. "The Polanyian Way? Voluntary Food Labels as Neoliberal Governance." *Antipode*, 39, pp. 456～478.

_____. 2008. "Thinking Inside the Neoliberal Box: the Micro-politics of Agro-food Philanthropy." *Geoforum*, 39(3), pp. 1241～1253.

Hay, James. 2003. "Unaided Virtues: The (Neo)Liberalization of the Domestic Sphere and the New Architecture of Community." in Jack Z. Bratich et al. (ed.). *Foucault, Cultural Studies, and Governmentalit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165～206.

Herbert-Cheshire, Lynda. 2000. "Contemporary Strategies for Rural Community

Dedevelopment in Australia: A Governmentality Perspective." *Journal of Rural Studies*, 16(2), pp, 203～215.

Lemke, Thomas.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2), pp. 190～207.

_____. 2002.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14(3), pp. 49～64.

_____. 2011. "Beyond Foucault: From Biopolitics to the Government of Life." in Thomas Lemke et al. (ed.). *Governmentality: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pp. 165～179.

Lessenich, Stephan. 2011. "Constructing the Socialized Self: Mobility and Control in the Active Society." in Thomas Lemke et al. (ed.). *Governmentaltiy: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pp. 304～320.

Lipschutz, Ronnie D. 2005. "Power, Politics and Global Civil Society."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3(3), pp. 747～769.

Mitchell. Timothy. 1999. "Society, Economy, and the State Effect." in George Steinmetz. (ed.). *State/Culture: State-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76～97.

Peters, Michael A. & Patrick Fitzsimons. 1999. "Neoliberalism and social capital: Re-inventing community." *Sites: A. Journal for South Pacific Cultural Studies*, 37, pp. 32～48.

Rose, Nicolas, Pat O'Malley, & Mariana Valverde. 2006. "Governmentalit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 pp. 83～104.

Rose, Nicolas & Peter Miller.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3(2), pp. 271～303.

Rose, Nicolas. 1996a. "The Death of the Social? Re-figuring the Territory of Government." *Economy and Society*, 25(3), pp. 327～356.

_____. 1996b. "Governing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Nikolas Rose et al. (ed.).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Rationalities of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7～64.

_____. 1999. *Power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amir, Ronen. 2008. "The age of responsibilization: on market-embedded morality." *Economy and Society*, 37(1), pp. 1～19.
Vallentin, Steen & David Murillo. 2012. "Governmentality and the politics of CSR." *Organization*, 19(1), pp. 1～34.

□ Abstract

Genealogy of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Joo-Hwan, Kim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from the Foucauldian perspectiv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the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refers to the current phenomena that social units, such as corporations, trade unions, NGOs, and consumers, voluntarily have begun to assume social responsibilities, instead of the state. I argue that the neo-liberal social responsibilization is not the restoration of the socio-moral solidarity at all, but a technology and an effect of the neo-liberal governmental territorialization of the social solidarity. In this context, I analyze the following four aspects engaged in the current social responsibilization as a neo-liberal governmental technology: knowledge and regimes of truth, technologies of power, technologies of the self, and the technologies of individuals. Then I suggest som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First, regarding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and moral concerns are reframed in terms of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reduced into specific instances of management strategies. Second, regarding the ethical consumption, as being transformed from the subjects of rights to the subject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dividuals voluntarily come to control their potential for resistance in order to defend society from the risk which could be posed by themselves if they remain subjects of rights. Finally, in these contexts, a series of

tendencies among Korean progressive camps, which sugges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ethical consumption as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will unintentionally result in the reinforcement of neo-liberal government.

Keywords: Neo-liberalism, Governmentality, Power, Knowled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thical Consumption, Social Responsibilization